

한화그룹, 비상경영체제 가동 고려

김승연 회장 실형선고로 경영 차질 ... 해외 프로젝트 물거품 우려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7월2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계 10위권인 한화그룹의 경영차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화그룹은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글로벌 사업의 추진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타개할만한 묘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매출의 90%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외사업을 계열사별로 활발히 추진해오던 터였다.

한화 관계자는 “석유화학, 건설, 금융 등 계열사별로 추진해오던 굵직한 해외사업만 해도 10여건, 수십조원에 한다”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내리고 상대기업을 설득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총수의 몫인데 지금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논리의 하나로 수조원의 중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뒤 상대기업측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강력히 항의해 이중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한화그룹은 5월11일 김승연 회장이 구속된 이후 금춘수 경영기획실장과 계열사 사장단이 김승연 회장을 수시로 면회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1년6월의 실형선고로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만큼 이제는 <비상경영체제>를 꾸리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한화 관계자는 금춘수 실장과 사장단 등이 협의해 <김승연 회장의 장기 부재>에 대비한 경영체제에 관해 몇가지 대안을 마련한 뒤 김승연 회장의 재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이며 지금으로서는 무엇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한화가 김승연 회장의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으로 금춘수 실장이나 부회장단, 주요 계열사 사장 등으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토록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으나 그룹 내부에서는 “김승연 회장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중대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한화측은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힐 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보석신청이 기각된 상태여서 당장 보석을 재신청하기는 어렵고,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대로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짓고 사면을 노리는 것도 당분간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화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김승연 회장의 건강도 많이 나빠져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03>